

“4대강, 시도지사 집단반대 옳지 않다”

이대통령, 시도지사 첫 간담회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전국 시·도지사과 청와대에서 가진 첫 오찬 간담회에서 지방정부의 협력을 당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친서민 정책을 비롯한 복지 분야와 일자리 창출 등에서는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시·도지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는 상견례 자리인 만큼 분위기는 시종 화기애애했으나 일부 야권 공역단체장이 4대강 사업에 대해 ‘속도 조절’을 요구하자, 이 대통령은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면서도 정치적인 반대에 대해서는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 한때 긴장감이 흘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4대강 사업 문제는 16개 시·도지사가 이 대통령에게 차례대로 건의를 하던 중 민주당 소속의 안희정 충남지사와 무소속 김두관 경남지사가 제기했다.

안 지사는 “4대강 사업이 정쟁화돼서 싸우길 원치 않지만 국민 사이에 갈등이 되고 있다”면서 “금강 사업과 관련해 천천히 합의 과정을 좀 더 밟을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김 지사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경남도민들의 걱정이 많다”면서 “반대하는 야당, 시민·환경단체 등과 (이 대통령이) 자리를 마련해서 이른 시일 안에 정리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자기 지역의 강 문제에 대해 의견을 얘기하면 충분히 듣겠다”



이명박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시·도지사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주호영 특임장관, 김두관 경남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박준영 전남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강운태 광주시장, 엄홍철 대전시장, 김완주 전북지사, 김관용 경북지사, 이 대통령. /연합뉴스

강운태시장 영산강 수질 개선할 수 있게 예산 확대를

박준영지사 F1그랑프리·J프로젝트 적극지원 해달라

며 “단체로 모여 다른 지역의 4대강 문제에까지 나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고 김 회장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은) 정치적 문제가 아니고 정책적 문제”라면서 “각기 자기 지역 특성에 맞는 의견을 내면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치적 견해만 갖고 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정치적으로 담이 다르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아예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어떤 시도지사이든 지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분을 열심히 도울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래도 협조가 덜 될 것”이라며 업무 성과가 예산 배분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임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시도 지사들이 토착·권력형·교육 비리 근절에도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또 지방재정 부실화 문제와 관련, “지방 기업은 철저히 감시·감독되는 것이 부족하고 사각지대에 있다”면서 “이제는 시·도지사가 지방공기업의 경영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말했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동북아 상품거래소와 함께 LED(발광다이오드), 태양광 관련 대기업을 광주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영산강의 수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해 줄 것, 그리고 ‘3할 자치’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열악한 지방자치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국가사무와 세원을 과감하게 지방에 이전해 줄 것도 요청했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사회복지분야 재원의 국고지원 확대와 함께 관광인프라 분야의 민간기업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대출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밖에 F1코리아 그랑프리 개최, 해상풍력산업 중심지 조성, 국가산업단지 지정,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J프로젝트) 등의 지역현안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임동욱·윤현석·김지을 기자 tuim@

시민정책비서관에 박병욱

靑, 비서관 인선 마무리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청와대 시민정책비서관에 박병욱(47) 경희대 NGO대학원 강사를 내정하는 등 비서관 인선을 마무리했다.

교육비서관에는 정일환(51) 대구가톨릭대 교수, 과학기술비서관에는 임기철(55)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원장이 내정됐다.

해외홍보비서관으로 손지애(47) G20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공동대변인이, 여성가족비서관에는 김혜경(54) 지구촌나눔운동 사무총장이 각각 내정됐다.

이로써 청와대 비서관 46명 가운데 20명이 교체됐고 25명이 유임됐다.

인사기획관과 정책기획관, 총무비서관은 공석으로 두기로 했다. 인사기획관은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업무를 직접 챙기고 정책기획관은 이동우 전 메시지기획관이 직무 대리를 맡게 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檢, 이영호 전 비서관 내주 수사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23일 이른바 ‘비선’으로 지목됐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의 연루 의혹을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수사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의 탐문 의혹에 대한 수사착수 여부도 급명간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광주 등 49개 軍 비행장 소음조사

年内 완료… 군 시설예정지구 지정 전 주민 의견수렴

전국 49개 군용비행장에 대한 소음 실태 조사가 올해안에 완료된다. 또 앞으로는 군사시설 예정지구 지정 이전 과정에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야 한다.

정부는 23일 오전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최근 군사시설 이전 및 군 소음과 관련해 증가하는 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들간 갈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군사시설 이전 및 군 소음 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제도 개선은 ▲군 소음 관리대책 제도와 ▲군사시설 예정지구 지정 이전 의견수렴 절차 의무화 ▲군사시설 사업계획 2단계로 구분 ▲군사시설계획과 도시계획간 연계방안 마련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올해까지 광주 등 전국 49개 군용비행장에 대한 소음 실태조사를 실시해 소음도가 표시된 소음지도도를 완성키로 했다.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해 작성되는 실태조

사와 소음지도는 측정된 소음도를 비행장 지도에 수치로 표시해 지역별 소음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군사시설 예정지구 지정 이전에 지자체와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하고 조정토록 했다.

또 현행 군사시설사업법은 ‘실시계획 승인’ 1단계만 규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사업계획 승인 및 예정지구 지정’(토지수용 결정), ‘실시계획 승인’(기본설계 승인) 등 2단계로 구분키로 했다. 환경영향 평가는 실시계획 승인 이전에 실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기아차 광주공장-영산강 환경청

남도 생태관광 바우처 협약

기아차 광주공장이 소외계층에 생태관광 기회를 제공하는 ‘남도 생태관광 바우처제도’의 후원업체가 됐다.

송천권(사진 왼쪽에서 두번째) 기아차 광주공장장은 23일 광주공장 연구실에서 정회석(· 세번째) 영산강유역환경청과 ‘남도 생태관광 바우처제도’와 관련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기아차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 후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기아차는 협약을 계기로 영산강 유역 생태계를 보존하는데 주도적으로 참여해 녹색성장의 중요성을 알리고 남도 생태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 공장장은 “광주공장을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남도 생태관광 바우처제도’란 생태관광을 통해 환경의 중요성 전파와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아동,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무료로 생태관광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녹색경영 사회공헌 제도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아침밥 먹기’ 쌀 소비촉진 나섰다

市-교육청-시민단체 ‘건강생활 광주본부’ 발족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 사회단체가 쌀 소비 촉진과 식문화 개선 캠페인에 나섰다.

‘쌀과 함께하는 건강생활 광주지역본부(이하 지역본부)’는 23일 5·18 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발대식을 열고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기로 했다.

지역본부는 이날 “맛벌이 부부 등 바쁜 경제 활동으로 아침 결식률이 증가하고 비만 등 국민 건강을 위해 쌀 중심의 건강한 식생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역본부는 또 “국민 대부분은 식량자급률이 낮은 밀가루 식품에 익숙해 식량안보도 취약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며 “밀가루 식품에 쌀가루 10% 이상을 혼합 사용하자는 운동도 펼치겠다”고 밝혔다.

지역본부는 ▲쌀가루 전문 판매 코너 신설 ▲외식 편의점에 쌀가루 이용 식품 판매 품목 확대 ▲특색있는 쌀 식품개발 및 소비확대 ▲광주 쌀 소비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광주지역본부에는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 대한주부클럽 광주지회, 생활개선광주시연합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윤현식기자 chadol@kwangju.co.kr

시 설

방만경영 지방 공기업, 구조조정 서둘러야

행정안전부가 광주·전남 6곳을 포함한 전국 16개 시·도 산하 30개 지방 공기업에 대한 일제 경영진단에 착수한 가운데 감사원은 지방 공기업을 상시 감사할 수 있는 ‘지방특정감사단’을 신설,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처럼 전방위적으로 나선 것은 지방 공기업의 재정 부실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광주·전남지역 공기업의 경영상황도 심상치 않다. 광주시 산하 공기업 4곳의 부채는 지난 2008년 4801억 원에서 지난해 7468억 원으로 1년 새에 55.6%가 급증했다. 전남 공기업 2곳의 부채 역시 같은 기간 2865억 원에서 4236억 원으로 47.8%가 늘었다. 광주·전남 지방 공기업의 부채가 1조2천억에 육박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전남지역 지자체는 인건비를 부담할 여력이 없는 곳도 상당수에 이를 정도로 재정이 여의치 않다. 이런 상

황에서 지방 공기업의 부채마저 크게 늘고 있으니 문제다.

지자체가 효율성이나 타당성은 제대로 따지지 않고 단체장의 선심성 사업, 무책임하고 방만한 경영 등의 반복이 지방 공기업의 부채를 늘게 한 주요인이다. 여기에다 전문성도 없는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내거나, 퇴직 공무원의 자리 마련용으로 지방 공기업을 운영한 것도 재정부실을 키웠다.

문제는 지방 공기업 부실의 짐을 지역 주민들이 떠안게 되는 것이다. 지방 공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보다 엄격해져야 하는 이유다. 또한, 경영목표와 사업 범위의 명확성을 높여 방만한 경영을 미리 차단하고 설립 요건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정치논리가 아닌 경제논리에 따른 고강도 구조조정을 통해 지방 공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이 시급하다.

오현섭 전 시장 책임지는 자세 보일 수 없다

오현섭 전 여수시장이 뇌물사건과 관련해 한 달째 도피행각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최근 부산에서 오 전 시장의 행적을 확인해 강원도까지 추적이 나섰으나 검거 작전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시장은 모 종교단체 종사자와 동행하며 은신처를 수시로 옮겨 다니고 있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신병 이상설이나 외국 밀항설 등은 그저 소문이라는 이야기다.

오 전 시장의 도피행각은 여러모로 모양새가 좋지 않다. 도피 자체가 역대 뇌물수수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며 범행 사실을 순간적이나마 모면하기 위한 처사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도망자’라는 굴레는 시민들에게 커다란 상처를 남기는 일이다. 시장까지 지낸 사람으로서의 그 비굴함에 자존심마저 상하는 것이다.

이번 뇌물사건 관련자는 오 전 시장

을 비롯해 경관사업자로부터 2억6000만원을 받은 김모 전 국장과 김 국장에 게 1억원을 받아 의원들에게 뿌린 주모씨, 그리고 시 의원 10여명 등 상당수에 이른다. 그러나 오 전 시장이 잡적 상태이고 주지 또한 중국으로 도피해 경찰이 실제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 중에는 각종 설과 억측이 퍼들며 민심도 혼란스럽다 한다.

오 전 시장은 하루빨리 수사에 응해 떳떳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행정고시 출신에 광주시 기획관리실장, 내무부 국장, 전남도 행정·정부부지사를 역임한 그의 도피행각은 모두에게 실망이자 누가 되는 일이다. 그가 최대 업적으로 내세우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 개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제 오 전 시장에게 달리 선택의 길은 없다. 법의 심판을 받는 게 유일한 카드로일 뿐이다.

목포 옛 중앙시장에 랜드마크

31층짜리 쌍둥이 빌딩 신축

목포시-LH 협력 조성

목포 원도심에 주거와 상업, 행정 기능을 갖춘 31층짜리 쌍둥이 빌딩(조감도)이 신축된다.

목포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23일 목포시 남교동 구 중앙시장 부지에서 정종득 목포시장을 비롯해 박지원 국회의원, 이호균 전남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住)·상(商)·관(官) 복합건물 기공식을 하고 공사에 들어갔다.

이 건물은 지하 4층, 지상 31층 규모의 쌍둥이 빌딩으로 지상 1~2층(6200㎡)은 상가, 3~5층(1만1300㎡)은 행정타운으로 조성하고 6~31층은 아파트(204가구), 지하 4개층은 주차장(268대)이 들어선다.

전국 최초로 지자체와 공기업이 협력해 추진한 이 건물 신축사업은 서남권 랜드마크 조성은 물론 유동 인구와 정주인구 확보로 침체된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은 지난 1995년 중앙공설시장 건축물 안전진단 결과 구조상 결함이



드려나 시장 상인들로 구성된 (주)중앙시장에 매각해 재건축을 추진하던 중 사업자가 수차례 바뀌고 일단 부도로 장기간 중단된 채 방치돼왔다.

/서부취재팀=이상선기자 sslee@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淸			논설주간 申滄樂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사 회 2 부 2200-692 〈F A X 227-0118〉	경영지 원 국 2200-511 문화홍보 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디 자 인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편 집 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정 치 부 2200-634	여론매체부 2200-679				
경 제 부 2200-641	체 육 팀 2200-663				
사 회 1 부 2200-612	사 진 부 2200-691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빛日만평

- 김중두



이젠 사둔마저도 도움이 안된다